

# 국내 과학기술 NGO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박상욱(spark@scieng.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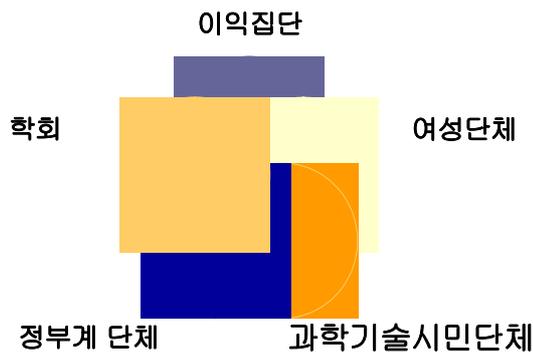
## 1. 머리말

처음에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는 UN 산하에 있으면서 어느 나라 정부와도 무관한 국제기구를 의미했다. 그러나 근래에 NGO라고 하면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를 총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리나 친목 등의 사적 목적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익목적임을 표방하는 비정부 단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 스스로를 NGO라 지칭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 주도로 결성된 단체나 재정적으로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단체들조차 NGO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NGO의 정의와 범위 자체가 모호한 실정에서, 가뜰이나 터전이 협소하고 활성이 없는 국내 과학기술 NGO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다르게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다룰 만한 NGO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NGO의 현황과 속성, 한계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2. 국내 과학기술 관련단체 현황

과학기술 관련단체, 또는 과학기술인 단체를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그림 1>과 같다. 각 그룹간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설립 동기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다섯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 다섯 그룹 중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과학기술 NGO라 볼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시민단체'로 명명한 그룹이다.



<그림 1> 성격에 따른 과학기술단체 구분

재정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활동 내용이 순수하더라도 자생적 단체가 아닌 경우가 이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각종 재단이나 관외각 추진기구가 이에 속한다.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 단체인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는 구성원의 순수성이 인정되나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과기부 주도로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있는 단체로 정부계 단체로 여겨진다. 역사가 오래된 여러 과학기술계 기성 단체들의 경우도 자생적으로 결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결성

이익집단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경우는 산업분야와 보유 기술에 따른 동질적 과학기술인 집단 또는 기업 연합체들이다. 각종 협회, 특정 자격증이나 직능인의 모임,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가 이에 속한다. 이 단체들은 관련 산업의 보호 육성과 지역 발전, 구성원의 권익 보호와 신장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계 단체란 정부 주도로 결성된 조직으로서, 단체의 대표에 정부, 국회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경우가 많고, 정부의

동기와 과정이 희석되었으므로 별도의 경우로 다루기로 한다.

과학기술계의 여성단체는 대표 격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를 비롯하여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여러 단체가 비교적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들 중에는 자생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많아 고무적이거나, 그 성격과 활동 내용이 과학기술계에서 현실적 마이너리티인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소수성 극복과 결집, 친목 등에 치중된 면 때문에 일반 과학기술시민단체보다는 여성단체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인재풀이 넓지 않은 이유로, 여성 과학기술 단체를 주도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고, 이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칫 오해될 소지가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국내 과학기술인 모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각종 학회이다. 앞서 언급한 이익집단이 주로 산업계와 기능기술인들의 단체라면 학회는 주로 학계와 교수, 연구원들이 속해 있다. 회원수 수만 명의 대형 학회부터 수십 명에 불과한 분과회나 소모임까지, 수백 개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대다수가 활동 중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소속된 학회만 해도 2003년 현재 288개로, 연인원이 40여만 명에 달한다. 중복 소속된 회원의 수를 고려하더라도, 학회 형태의 활동이 국내 과학기술인들이 모이는 주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회는 본연의 취지상 학술적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과 구성원간 논의의 내용 역시 학술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다. 구성원간 네트워킹 기능에 있어선 국내 과학기술인들을 서로 잇는 데에 핵심적인 단체 집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학술적인 면 외의 사회 참여와 대외 활동은 미미한 편이다. 또, 기성 교수와 연구원 중심으로 정회원이 구성되어 있고 학계의 선후배-사제 관계로 얽혀있어 소장 과학기술인이나 대학원생의 주도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학회 집단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띠며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다.

분야	회원 수	학회 수
이 학	49,055	40
공 학	164,042	75
농수산	35,198	44
보 건	118,282	91
종 합	52,562	38
계	419,139	288

<표 1>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소속 학회

### 3. 과학기술시민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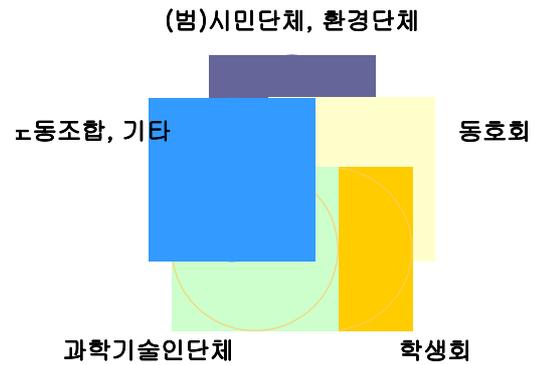
과학기술시민단체는 위에서 다룬 단체 혹은 집단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적으로 결성되었을 것 또는 현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 둘째, 재정적으로 자립했거나 독자적 노선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일부만 외부 보조를 받을 것. 셋째, 학술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학문 교류의 목적을 가지지 않을 것, 넷째, 영리를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의 배타적 이익을 주장하지 않을 것 등이다. 과학기술시민단체를 성격과 활동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 1) 과학기술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경우, 근본 취지상으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증진에 있으므로 이익집단으로 구분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과학기술 관련 노동조합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그들 스스로의 자리매김에 있어서 ‘노동자’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내 다른 산업계에 비하자면 출연연 연구원들의 처우나 직업안정성이 떨어진다고는 결코 볼 수 없으므로, 그 노동운동의 형태와 강도 자체가 민주노총 산하 다른 산별노조와는 분명히 차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는 사업장별로 구성

원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사회적 책임 문제, 연구 윤리, 과학기술의 역할, 그리고 시민 참여 등 과학기술 현장 연구원들의 진보적 활동 단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과기노조는 대덕의 연구원 노동조합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체 연구원의 대다수가 소속되어 있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기업체 연구원의 참여는 전무하다시피하며 출연연의 경우 연구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연구원의 소속과 참여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부 연구원의 경우 과기노조를 ‘연구소 행정직 노조’라고 치부하는 사례도 있다. 그것은 과기노조가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연구 환경 개선에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회일반의 노동조합의 성격과 달리 시민단체적 성격을 갖는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연구소 행정직 노조원의 경우 파업 등의 집단행동에도 나서는 등 과기노조가 노동조합의 성격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구성원도 많아 과학기술 관련단체, 과학기술인 단체로서의 모습과는 간극을 낳고 있다.



<그림 2> 과학기술시민단체 분류

### 2) 이공계 학생조직

이공계 대학/대학원의 학생조직은 조직화 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각 대학에 공과대학 학생회, 이과대학 학생회가 있으니 학부 학생회의 경우 그 성격이나 활동 내용이 인문사회계 단과대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소위 학생운동계열의 노선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과학기술분야 전공자라는 자리매김을 하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불어 닥친 이공계 기피현상의 이슈화 속에서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총학생회를 제외한 다른 이공계 대학 학생회에선 무반응으로 일관했으며 이러한 문제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이공계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생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KAIST 대학원생 총학생회는 1973년 처음 구성되었는데, 대학원이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학부가 개설되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대학원 과정만 개설된 광주과학기술원에도 대학원생들의 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를 비롯한 종합대학의 경우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회가 조직된 곳이 없어 예비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활동의 1차 결집단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포항공대의 경우 대학원 학생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대학원생회의 경우 그 관심사를 학내 문제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금년 6월 발생한 KAIST 풍동실험실 사망사고등과 관련해, 대학원 실험실의 안전문제나 대학원생의 위상문제에 대해 KAIST 대학원총학생회가 나서서 외부단체와의 연대등 대외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관련 동호회의 경우, 과학 대중화와 관련된 취미활동을 함께하는 모임이다. 이들은 대전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과 그 가족들의 참여, 또는 지역 자체의 과학기술 중심적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전의 여러 동호회들이 모여 대전지역과학동호회연합회를 조직해 활동 중이다.

### 3) 소모임 및 기타

과학기술인들의 모임으로 아직은 소모임의 성격인 작은 모임들이 인터넷에서 속속 생겨나고 있다. 전공별로 인터넷 카페가 생겨나고 점차 회원을 확보해가고 있는데, 전공 공부와 관련된 정보

공유가 주목적이다. 하이브레인 특레닷컴, 국내학위자 모임 등은 독특한 성격을 지닌 이공계 출신자 모임이다. 창원대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홈페이지로부터 시작한 하이브레인은, 이공계 고급인력, 주로 교수직 희망자들의 구인구직 정보 공유 사이트로, 많은 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전문적 이공계 구인구직정보 사이트로 거듭났다. 이곳의 게시판에선 간혹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즉석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공계 기피현상과 관련된 주제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인구직, 특히 교수직과 관련한 정보 교류 목적의 사이트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보다는 개개인의 취업문제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레닷컴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이공계 병역특례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계획 중인 사람들의 인터넷 모임이다. 이곳 게시판은 특례제도, 선발 시험, 자격증, 병역특례지정업체, 또 4주간의 군사훈련에 대한 질의응답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조치와 현재 복무중인 자들에 대한 소급적용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병역문제 외에 관심사가 다양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욕구에 비해 실질적 참여가 미약하다. 국내 학위자 모임은 외국 이공계 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내 학위 소지자들의 모임으로서 외국 학위자와의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운동을 펼쳐 나간다면 국내 과학기술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테마 하에 모여 있다고 평할 수 있다.

과학기자협회와 과학평론가협회는 언론 분야에서 일하는 이공계 출신자들의 모임이다. 과학기자협회의 경우 과기부 출입 기자 또는 각 언론사의 과학담당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공계 출신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주요 활동 멤버는 이공계 출신의 중앙언론사 기자들이다. 과학기자협회의 이름으로 대외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나,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소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과학기사의 질을 높이고 이공계인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돕고 있다.

개혁당 과학기술위원회는 정당에 속한 일반 당원들의 과학기술 동호회로는 국내 유일의 모임이다. 이름과는 달리 공식 위원회가 아닌 동호회로 분류되고 있으며, 진보적 성향인 개혁당원중 과학기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문제, 언론문제 등에서는 진보적이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시각은 뒤에 언급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와 다르다.

#### 4)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이 그룹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존 시민단체 내에서 과학기술 관련 분과나 모임이 결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NGO 불모지라고 할만한 국내 과학기술 환경에서 그나마 꾸준한 활동과 생명력을 보여 왔고, 사회적 참여를 게을리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다.

대표적인 모임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이다. 과학기술 관련 NGO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단체로서 그 진보적인 성향과 구성원의 다양성, 연령대 등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일찍이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관관계,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스터디그룹 등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참여연대 내에 등지를 틀었다. 그들은 과학기술 전공분야의 연구원으로 취업하기보다는 인문사회적 소양을 겸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분야로 많이 진출하여, 현재에도 언론사와 정책연구기관 등에 다수가 포진해 있다. 시민과학센터의 주 관심 분야는 이외에도 과학기술 윤리, 인권, 정보화와 생명공학의 부작용, 반전반핵 등 다양하다. 다만 과학기술정책 결정에의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기성 과학기술인들과 다소간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기술계 전반과의 협력, 공조관계 구축보다는 과학기술의 과속 발전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와 카이스트 출신의 소장 과학기술인 모임인 청년과학기술자네트워크는 시민과학센터와 노선을 함께하며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과

학센터와는 달리 구성원 대다수가 과학기술 전공자로서 좀 더 과학기술자 스스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설립 준비 중인 대전 과학상점에 이 모임의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학상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아 수행하는데, 대전 과학상점은 대학이 중심이 되는 네덜란드식과는 달리 지역 과학기술시민단체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에너지대안센터 등 환경관련 단체들의 경우 과학기술인들의 모임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그 운동 대상이 주로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고 구성원 일부가 진보적 과학기술인들이므로 과학기술 시민단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생태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발 논리에 예외 없이 반발하는 성향이 강하다. 환경 관련 단체의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원전 수거물관리센터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물리적 운동방식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유전자조작식물(GMO)이나 인간 배아 대상 연구, 복제 생물등에 대해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입장과 종종 배치되고 있다. 과학기술인들의 폭넓은 참여로 전문 지식과 시각이 보강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단체는 주로 정보화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전자정부, 전자주민등록증 등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내고 있으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주하는 시스템 운영체제(OS) 시장에 반대하고 오픈 소스(open source)를 주장하는 등 정보기술분야의 진보단체이다.

참여연대와 더불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 NGO의 개척자라 불릴만한 몇몇 이공계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과학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와해가 반복되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공계 교수나 기성 과학기술인 또는 전문직 종사자로 구성되다보니 진보적이기보다는 중도적 성향이라 볼 수 있다. 최근에 확정된 이공계 공직진출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새로 조직된 경실련 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공계 출신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진보적 과학기술시민단체들이 가진 한계는 대다수의 보통 과학기술인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이들이 과학기술의 부작용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또, 그러한 단체들이 소속한 모(母)시민단체들이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와 전통, 또 상근직원과 조직, 정기간행물 등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는 이러한 단체들이 활동반경을 넓힘과 동시에 과학기술인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 5) 과학기술인 단체

과학기술인 단체는 자생적으로 결성되었거나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학술적, 범과학기술적 목적을 가진 경우로 국한한다. 직간접적으로 범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가장 크고 오래된,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이다. 1966년 결성되었으며, 처음부터 과학기술계의 수장격인 원로 인사로 회장단을 구성하였다. 역대 회장은 교수 출신이 절대다수이며, 과기부 장관을 역임한 분도 여럿이다. 과총은 자체적으로 수많은 회원을 직접 보유했다기보다는 국내 과학기술단체의 연합회 형태로, 각종 학회들을 그 회원으로 하고 있다. 주장하는 회원 수는 백만 명이나, 학회 등예의 중복가입에 의한 중복계상을 고려해야 하며 1차적으로 소속단체가 따로 있고, 그 소속단체의 연합회가 과총이니 구성원 개개인의 소속감이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 과총은 매년 과학의 날 관련 행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 과학기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도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로 인정받는 데에 이견이 없다. 과학

대중화 관련 사업이나 학술교류, 장학사업 등에도 관여하는 등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거대단체로서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장 과학기술인중에는 과총의 수직적이고 학계 원로, 보직 교수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도 많으며, 오랜 시간동안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근래에 이공계 위기론, 이공계 기피현상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과학기술계의 기성세대들의 책임론까지 들먹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공계 기피현상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의약계열 선호 열풍 때문에, 보건의료 관련 학회가 다수 과총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과총의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 역할에 아쉬움을 갖게 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총은 현실적으로 과학기술계를 총괄해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며, 기성 단체로서는 유일하다는 것이다. 학계 뿐 아니라 일선 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아쉽다.

과총과 마찬가지로 과기계의 원로들이 나서 결성했으나 자생적 성격이 강한 단체로는 전국과학기술자협회(전과협)와 한국공학한림원을 들 수 있다. 전과협은 과학기술자들의 상호 연결과 전국조직화, 나아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최근까지도 꾸준한 활동을 펴고 있다. 전국적으로 4천여 회원이 오프라인상 실명 가입되어 있으며, 시도별 지부 조직도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이공계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며 친목단체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각 당의 대선 공약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참여와 이공계 기피현상 극복에 일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전과협의 경우 신규 회원들은 소장 교수와 연구원이 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공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모임으로, 한림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현직 학장등 원로급과 기성 공학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후학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이공계의 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와 참여를 아끼지 않고 있어 학계 원로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일반시민이나 범이공계출신자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한 단체는 아니지만, 활동 내용상으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가 밀집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전지역에서는 대덕클럽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연합회(연발협)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다. 대덕클럽은 대전지역 중진 교수와 연구원들의 모임으로, 정기 토론회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참여, 지역 과학 활동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생적 중견 과학기술인 단체로서 지역 과학기술인의 사교 모임 성격도 가지고 있다. 구성원 대다수는 대전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중앙 정관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연발협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중견 연구원들의 모임으로 주로 책임연구원급 이상이 많다. 과기노조와는 구성원과 노선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행정직 참여도 없다. 출연연 연구원들을 대변하며 과학기술인 공제회나 출연연연합대학원등의 사안에 있어선 다소간 압력단체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대덕클럽과 함께 정책 제안과 참여에 적극적이다. 교수 집단이 아닌 연구소 연구원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출연연구소 체제 개선과 발전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은 활동이 미미하거나 옛 구성원간 안부 연락이 이루어지는 수준이지만 소장 과학기술인들의 자생적 모임의 원조 격으로는 청년과학기술자협회(청과기협)와 한국과학기술청년회(한과청)가 있다. 과거 과학기술 운동을 시도하고, 특허법원 설치를 위해 직접 노력하는 등 과학기술시민단체의 태동기에 활동했던 단체들이다. 80년대 학번으로 소위 386세대인 이 단체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 중이고, 일부는 현재의 과학기술 관련단체에 관여하고 있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 크게 공통적인 것은 아니나, 이 단체들의 정신을 한국과학기술인연합(과기인연합)이 일부 계승하고 있다.

과기인연합은 2002년 초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결성 1년 반여가 지난 현재에도 주 활동무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현상 극복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표방했는데, 현장 과학기술

인의 현실과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문제에도 폭넓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애초부터 ‘보통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무색무취를 추구해 왔다. 그러다보니 보수층으로부터는 진보적이라는, 진보층으로부터는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회원수가 1만 명에 육박하나 인터넷 가입 회원의 숫자이므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긴 어려우며 20여명의 운영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 중 약 40%가 대학원생일 정도로 연령대가 낮으며, 주로 활동하는 계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신진연구인력으로 기업체나 연구소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결성직후 이공계 기피현상의 이슈화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를 두고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소장 과학기술인과 학생들이 많다보니 병역특례제도의 문제,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 과학기술인 실직과 처우 문제 등 현실적 문제가 주관심사이고, 실험실 안전문제, 과학기술정책 등에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기인연합은 인터넷 시대의 코드에 맞는 모임으로서 여태 없었던 소장 과학기술인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반대로 이공계 교수와 기성세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쉬우며 인터넷 기반 모임으로서 실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 등 기성 과학기술인단체에 비해 미비한 점이 많다. 그러나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단체들과 제한 없는 연대를 추구하고 있어 모멘텀을 유지한다면 향후 좋은 결실이 기대된다.

#### 4. 국내 과학기술 NGO 활동이 저조한 이유

사회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국내의 과학기술 NGO의 숫자와 활동도는 미미한 편이다. 혹자는 그 이유를 분석하며 “과학기술자들이 7, 80년대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경제개발의 도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힐난하기도 한다. 90년대 이후 과거 민주화운동 세력이 자연스럽게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전이하고 시민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음을 감안한다면 일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공계 대학생과 졸업생들이 민주화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운동의 주제가 민주화였기에 과학기술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로 현재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의외로 이공계 출신이다.

과학기술 NGO의 활동이 저조했던 이유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가 저조한 탓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 자체가 갖는 가치중립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과학기술은 인류 공통의 언어로서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는 성격이 있다. 과학기술인들이 인재 유출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해외 이주와 국외 취업에의 거부감이 약한 것도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이다.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에 관련한 자신의 소명을 연구에 매진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사회 참여활동을 하더라도 과학기술과 무관한 분야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계의 문제나 연구개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 ‘기술자가 연장 타하는 꼴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움츠린 것이다.

과학기술은 지식 장벽이 매우 높아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외부인의 영향에 의해 단체가 조직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80년대 초 대학생들이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운동의 단초를 제공한 것과 비교할 때, 과학기술운동은 과학기술인들이 스스로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계의 폐쇄성은 선후배와 사제지간으로 얽힌 수직구조와 맞물려 과학기술인들의 조직화와 집단행동을 가로막아온 가장 큰 장벽이다. 과학기술 연구 외의 사회활동을 경원시하는 풍조와 동분야에서의 독특한 경쟁의식도 행동하려는 과학기술인을 ‘나서지’ 못하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국내 과학기술단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공계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운영되어 왔다. 그것은 국내 이공계의 지나온 길과 관련이 있는데,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절대다수

가 대학에 편중되어 있었고 현재도 70% 이상이 몰려있어 과학기술인이란 곧 이공계 대학교수라는 등식 아닌 등식이 오랜 기간 성립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들은 일반 대중에 의해 우리 사회 내에서 성공한 계층으로 인식되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다. 즉, 교수들이 주도해 온 국내 과학기술 단체에서는 현장 과학기술인의 처우 문제, 대학원생 위상 문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한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80년대 들어, 이공계 대학의 정원이 대폭 증원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 대학에 몰려들었다. 이들이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학위를 마치자 국내 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하여 많은 수의 이공계 고급인력이 기업체 연구소에 취업했다. 80년대 말은 이공계 출신자들의 작은 전성기라고 불릴 만 하다. 대학 입시에서 이공계 강세현상은 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고, 이때 입학한 인재들이 국내 대학원에 대거 진학하면서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기능도 크게 제고되었다. 80년대와 90년대 초에 이공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은 석박사 학위자로 배출되면서, 바야흐로 국내 과학기술계에 허리에 해당하는 소장 과학기술인 그룹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외환 위기와 불경기 등으로 이들이 타격을 입고, 기업체 연구원의 직업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공계의 인기는 급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년 만에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사회문제화 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소장 과학기술인들이 들고 일어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과학기술 NGO의 활동이 미미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에 아쉬운 것이 없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일부 기성 과학기술인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그동안 방치했던 여러 문제가 불거져 이공계 기피현상을 낳았고, 국가적 과학기술 마인드 결여, 연구개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또 그래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 5. 과학기술 NGO의 발전방향

국내 과학기술 NGO의 현황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직 전국의 과학기술인을 하나로 묶을만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구성원 하나하나가 소속감을 느끼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상향식(bottom-up) 구조와 용이한 접근성을 갖추고, 구성원간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그래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단체야말로 진정한 과학기술 NGO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과학기술 NGO의 모습은, 전업 시민운동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과학기술 현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살리고, 경험으로부터의 정책 제안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전연령대에 걸쳐 참여하며, 대외 진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내외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구성원을 적극 대변함으로써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작년에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러 사회부문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더니, 과학계를 신뢰한다는 답이 73.3%로, 법조계(33.8%), 행정부(24.6%)등은 물론 종교계(50.5%)보다도 높게 나와 단연 가장 신뢰받는 집단으로 꼽혔다. 그만큼 과학기술인들은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이라는 뜻이다.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도 ‘로비나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 같다’는 류의 반응이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만큼 순수하기에 정치적 영역다툼에서 밀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의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과학기술 NGO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적 신뢰와 기대감에 걸맞게 공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소위 전문직의 특권 영역 챙기기에 대해 거부감

이 상당하다. 과학기술인은 평균적 국민 수준에서 볼 때엔 아직도 ‘가방끈 긴 사람들’에 속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열악한 처우’를 운운하는 것이 사치로 보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과학기술 NGO운동은 국민 대중과의 소통을 도모해야 하며, 집단 이기주의나 처우 개선 투쟁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공계 기피현상 속에서 과학기술인들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다소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공계 지원, 우대 정책들이 여론의 큰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특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선 안 되며 선심성 우대 조치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과학기술 NGO가 발전해 나아갈 방향은 그 단체가 속한 그룹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기존 시민단체 계열의 진보적 단체들은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노선이므로, 과학 대중화, 과학상점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유대, 미국 과학기술자 연맹과 같은 반전 운동 등 사회적 기여를 추구할 수 있다. 또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활동으로는 연구 윤리 현장 제정, 과학기술 윤리국 설치 운동과 같은 연구 윤리에 관련된 활동도 기대된다.

둘째, 중진 중심의 과학기술인 단체나 현장 과학기술인 단체는 과학기술정책 개발과 제안 능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가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 마인드를 갖추고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는 이공계 출신 공직자, 정치인, 지도자감을 발굴 육성하고 인재풀을 조성하는데에도 일조해야 한다. 또한 과학 대중화와 이공계 기피현상 극복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들의 상호 네트워킹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의 마이너리티가 아닌 여론 주도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크게 대변할 수 있게 성장할 것이 요구된다. 노-소장, 청-장년으로 뚜렷이 갈려 소통 단절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고질적 수직구조도 교류와 상호존중을 통해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 정부는 공익적 성격의 과학기술인 단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연구개발 내용을 공개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 하며, 대중과의 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정부와 과학기술인은 상명하복식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여야 옳을 것이며, 과학기술인이 더욱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 NGO는 현장 과학기술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잊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해가며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 공동체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맡는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